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2022년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일 2022년 8월 30일 |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 편집인 이규용 | 편집교정 정철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

박성재**

I. 서론

식품산업(음식료품제조업)¹⁾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인구 및 소득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55조 2천억 원에 그쳤던 식품산업 출하액이 2019년 96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5.2% 성장했는데 이는 제조업 성장률(3.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식품산업 시장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총산출액이 2010년 87조 2천억 원에서 2020년 131조 9천억 원으로 5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성장률(12.3%)과 비교하면 식품산업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한국은행 국민계정). 이 결과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총산출액은 2010년 5.8%에서 2020년 7.9%까지 증가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6년 6.4%에서 2019년 6.7%으로 성장해 국민경제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식품산업은 제품 특성상 인구 및 소득 증가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 201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 또한 하락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식품산업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고령화와 1인가구 증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제품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대사질환이 증가하면서 식생활을 통한 웰빙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시장

* 이 글은 박성재 외(2021),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재 외(2021)를 참고하기 바람.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1) 식품산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명료하게 정의하기 용이치 않음.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되며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중의 제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업종을 총칭하는 개념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념인 음식료품제조업으로 한정하였음.

성장으로 이어졌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는 식사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과 같은 간편식품시장 성장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기능성 식품,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HMR과 온라인 및 배달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면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품소비지출액은 감소하겠지만 HMR로 대표되는 즉석/간편식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국내외 경기요인, 기후환경,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가 상호 맞물리면서 향후 식품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핵심 정책 현안 중 하나이다. 각국은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8년 2.184로 전 산업 평균(1.859)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6.0명(10억 원당)으로 전 산업(11.7명)뿐 아니라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식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일련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이하 활력대책)」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달리 활력대책은 5대 미래유망식품에 선택·집중한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활력대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 분야를 발굴·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추진한 지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성과를 살펴보고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 식품산업 정책과 고용연계성

1. 식품산업 정책 추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은 크게 진흥기본계획과 특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2007. 12. 27 제정)」에 의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08년 제1차 계획, 2012년 제2차 계획에 이어 2018년에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진흥계획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정책이다. 즉 1차 진흥계획에서는 aT 사이버거래소 개설, 식품분야 R&D 신설, 세계김치연구소 및 한식재단 설립 등이 추진되었고, 2010년 전통주(전통주산업진흥법),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외식산업진흥법)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차 진흥계획에서는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중국·할랄 등 신시장 개척, 김치·삼계탕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한식·전통식품 기반 확충을 통한 국산 농산물 사용액 증대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통주·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중소식품기업 지원이 강화되었다.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5대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가 선정·추진되었다. 여기서 5개 정책분야는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②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이다. 21개 세부 과제로는 가정간편식(HMR)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제적 육성,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식재료 및 포장 등 연관산업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창업 지원,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식품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외식업 경영안전망 구축, 협력·발전모델 발굴 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책내용을 볼 때 제3차 기본계획부터 유망식품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은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중심의 중장기 기초 계획이었는데 최근 글로벌 식품산업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유망식품에 집중한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식품산업활력제고대책」을 수립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활력대책은 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진흥계획이 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중심의 중장기 기초계획이라면 활력대책은 5대 미래유망식품에 집중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진흥계획의 주요 대상식품이 전통주, 김치, 쌀가공품 등 전통 식품이었지만 활력대책에서는 맞춤형·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진흥계획과 달리 활력대책은 농식품부 외에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활력대책의 세부 정책에는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식품별 전략과 과제, 그리고 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특수식품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R&D 지원, 기준설정, 분류체계 개선, 원료 표시기준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식품 역시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간편식품은 유형 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 정비와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수출식품은 한류와 연계해 수출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5대 유망식품분야는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태동단계이므로 대부분의 정책이 유형신설, 기준마련, 규제개선 등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 민간투자 확대, 청년창업 지원, 홍보·판로 지원, 안전·품질관리기준 마련 등 유망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력대책 발표 이후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정책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식품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확대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특수·의료용도식품 체계를 개편하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해 메디푸드시장 형성을 지원하였다. 고령친화식품의 대상 범위를 건기식 이외 일반식품까지 확대해 과거 환자용으로 성장해온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고령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특수식품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육류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식품 핵심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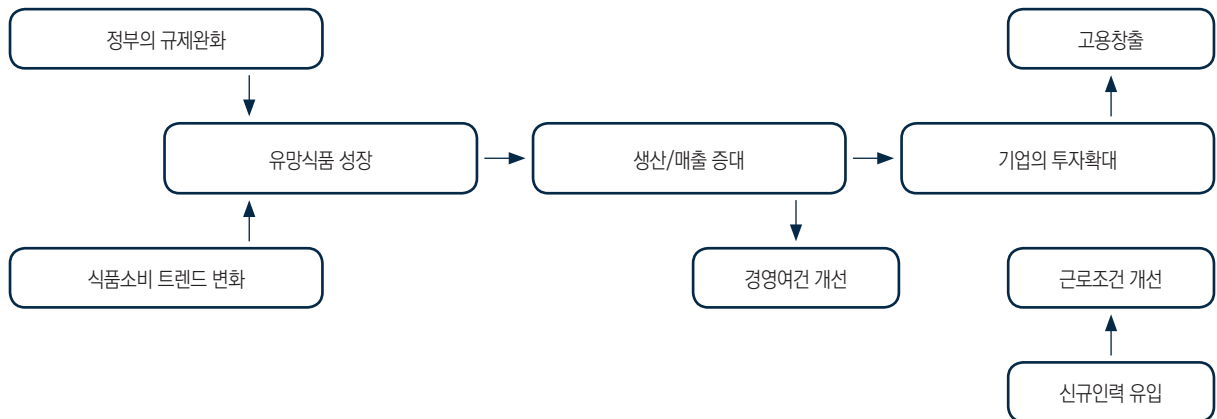
능성 식품 또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개인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건기식 소분·혼합 포장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 R&D 분야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기도 하였다. 간편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개정해 간편 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간편식품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푸드테크 창업교육 확대, 농식품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육성 지원,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유망식품 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경로

식품산업은 제품 특성상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가 지속되었는데 소득수준 향상,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한류 영향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또한 높아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가 식품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정부가 식품공전 개정,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면 유망식품 활성화정책 → 신시장 형성·확대 → 생산·매출 증가 → 신규 고용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활력대책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30년 24조 8,500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고용인력은 2018년 5.1만 개에서 2030년 11.6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성장률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훨씬 높은데,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는 더욱 높을 수 있다.

5대 유망 식품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건강기능식품, 맞춤형·특수식품)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그림 1]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성장에 따른 고용연계성



육구가 높는데 이는 식품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산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영세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인데 순이익 증가 시 일정 부분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5대 유망식품분야 육성은 청년고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경우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것이고 이는 신규 청년인력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망식품분야는 새롭게 형성되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청년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유망식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분야 및 제품 품질유지 및 공정관리를 위한 엔지니어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유망식품분야 성장은 고학력 청년인력의 유입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상기의 점들을 감안하여 유망식품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의 고용연계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3. 유망식품 현황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5대 유망식품이므로 이하에서는 유망식품 분야별 제품 특성 및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먼저 가정간편식(HMR)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면 간편하게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등이 해당된다. 즉석식품류 시장규모(생산액 기준)는 2019년 기준 4조 2천억 원으로 최근 4년(2015~2019년) 동안 연평균 17.2% 성장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가정식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기존의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도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밀키트(간편조리세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소스 등 조리に必要な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만든 제품으로 과거에는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되었으나 2020년 6월 29일 고시에 의거해 별도 규격으로 신설되었다. 밀키트 또한 스타트업에 이어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초기에는 냉장 밀키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이후 냉동 밀키트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최근에는 지역성·유명 맛집과 연계한 밀키트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21년 7조 원(소매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성 식품은 크게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별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29일 고시에 의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9년 2조 9,508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8% 성장했는데 전체 식품산업 추이와 비교할 때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져 향후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홍삼을 포함한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품목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같은 기능성 제품 외에 암,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제, 진단제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연평균 7.6% 성장하였는데 국내는 연평균 33.9% 성장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식품 전문기업보다는 제약회사나 포스트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는 특정 식이관리나 영양 조건의 요구되는 환자나 고위험군의 질병 관리·회복을 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6월 고시를 개정해 명칭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시 개정에 의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유형이 신설되었는데 국내 메디푸드시장 규모는 2010년 273억 원에서 2018년 770억 원으로 연평균 13.8%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화를 시도 중이다. 유전체 분석·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유전정보·생활양식 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형태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장규모는 2025년 1,9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식품시장 형태로 성장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 섭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단의 배송서비스, HMR 제품개발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병원식이나 치료식 위주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영양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고령친화식품의 분류 및 기준·규격을 2020년 6월 고시를 통해 신설했는데 고시에 의해 대상 제품에 식품이 추가되고,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서 전체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고령친화식품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연평균 7.3%(2017년 기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세계시장규모는 1,353억 6,800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국내의 경우 시장이 현재 형성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시장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본의 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와 고령자 수, 1인당 GDP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2020년 7,290억 원의 시장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박미성 외, 2021).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기존 유

동식 위주에서 일반 고령식으로 제품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처도 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일반 고령자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대체식품은 특정식품(원료)을 대신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료 또는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식품과 유사한 특성 및 용도를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이다. 세계 대체 단백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유사육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1%로 가장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물성 고기 시장규모는 2017년 5,8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식물성 대체육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대기업들이 대체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배양육의 경우 시제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중심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단순 배합 수준의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식품기업 외에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의 대체육 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펫푸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말하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주식 및 간식 등 모든 먹이를 의미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배합사료의 경우 2019년 10만 9,800톤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는 2020년 7억 5천만 달러이며, 2023년에는 18.3% 증가한 8억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유망식품이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인 관계로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망식품이 식품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망식품 분야는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벤처분야이며 전통식품과 달리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화되고 있어 유망식품 시장이 확대될 경우 고용구조의 고도화와 근로조건의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 당위성은 낮지 않다.

III. 식품산업 추이 및 고용구조

<표 1>은 식품산업의 사업체, 종사자, 경영지표 추이를 보여 준다. 산업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산출액, 사업체 수 등 모든 지표가 우상향했으며 전 산업 및 제조업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훨씬 높다. 식품산업 규모를 보면 총산출액이 2010년 87조에서 2019년 129조로 47% 증가했고(연평균 4.4%), 생산액(GDP)은 2010년 17조 3,720억 원에서 2019년 22조 5,020억 원으로 연평균 2.92% 증가했다. 식품산업 성장에 힘입어 사업체 수는 2010년 5만 4천여 개에서 2019년 6만 2천 개까지 증가하였고, 종사자는 2010년 27만 7천 명에서 2019년 37만 4천 명으로 9년 동안 1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의하면 사업체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만 2,339개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서 폐업이 증가했지만 유망식품분야 신규업체 증가로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가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종사자는 37만 8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그동안 3%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식품산업은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여전히 높아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2015년에는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체였으나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체가 78.0%로 감소하였다. 반면 10인 이상 사업체는 2015년 8.8%에서 2019년 9.3%로 증가해 완만히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80% 가까이가 5인 미만 소기업인데 이는 제조업(63.1%)과 비교할 때 15%p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 식품산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2015년 5.7명에서 2019년 6.0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제조업(9.4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소기업 중심 구조이다. 이 결과 식품산업은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영업이익률은 4.5% 내외로 제조업(6~7%)보다 2%p 가량 낮고 부채비율은 93% 내외로 제조업(77%)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식품산업은 영세소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영업이익률은 낮아 R&D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혁신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식품산업은 경기순환 진폭이 작으며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갖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품산업은 농업·유통(물

<표 1> 식품산업 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 관련 지표 추이

(단위: 개, 명,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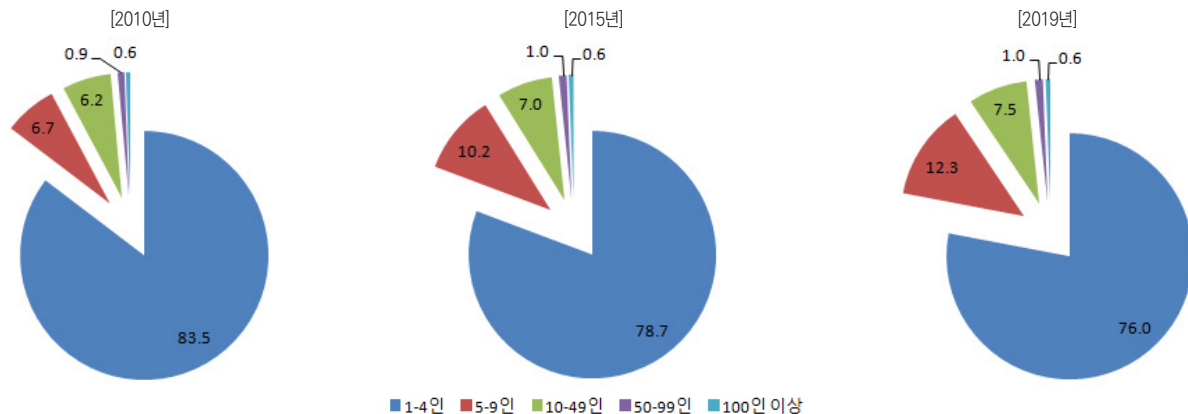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전 산업	3,355,459	3,874,156	3,950,169	4,019,872	4,103,172	4,176,549
	제조업	336,908	428,643	430,948	433,684	437,024	440,766
	음식료품	54,050	57,954	59,171	60,089	61,620	62,329
종사자	전 산업	17,646,973	20,889,239	21,259,126	21,626,904	22,234,776	22,723,272
	제조업	3,422,439	4,102,259	4,097,338	4,103,986	4,105,871	4,123,817
	음식료품	277,331	331,564	343,247	346,021	362,090	374,807
매출액	전 산업	-	-	5,462,931	5,836,148	6,033,069	6,195,098
	제조업	-	-	1,697,562	1,846,038	1,919,606	1,896,310
	음식료품	-	-	108,561	114,111	122,132	126,462
총 산출액	전 산업	3,118,936	3,728,704	3,807,505	4,042,788	4,207,661	4,236,362
	제조업	1,493,946	1,671,889	1,658,778	1,769,215	1,828,160	1,780,525
	음식료품	87,240	112,899	114,210	119,385	124,252	128,603
생산액	전 산업	1,426,618	1,658,020	1,706,880	1,760,812	1,812,005	1,839,523
	제조업	382,243	441,134	451,294	468,070	483,530	488,935
	음식료품	17,372	20,344	20,281	21,067	21,679	22,50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류)업·외식산업 등의 전·후방 산업과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연관관계가 큰데 음식료품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8년 2.184로 전 산업 평균(1.859)보다 높다. 특히 식품산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국내 농업에 대한 연계가 중요한데 식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6명(10억 원 당)으로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 평균(11.7)보다 높아 고용창출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식품산업은 외형상 큰 변화가 없지만 업종구조를 보면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5~2019년간 식품산업 업종별 추이를 보면 과·채가공(54.7%), 육가공(35.0%), 도시락 및 조리식품(42.6%) 등은 사업체가 40% 이상 증가한 반면, 유지류(0.8%), 곡물가공(5.3%), 떡·빵·과자류(1.1%), 알코올음료(6.2%)는 성장률이 식품산업 전체(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의 영향으로 업종 간 격차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품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할 경우 식품산업을 성장동력뿐 아니라 고용창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점은 종사자 중 여성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표 2 참조). 2019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종사자 중 여성 비중이 25.5%에 불과한데 식품산업은 46.5%에 달하고 있다. 식품 제조라는 제품 특성상 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고용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로 구분해 보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그림 2] 식품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2〉 식품산업 종사자의 고용구조

(단위: 명,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산업	소계		17,646,973	20,889,239	21,259,126	21,626,904	22,234,776	22,723,272
	성	남성	58.9	57.9	57.4	56.9	56.6	56.6
		여성	41.1	42.1	42.6	43.1	43.4	43.4
	종사상 지위	자영/무급자	20.1	18.6	18.3	18.3	18.0	17.9
		상용직	60.6	64.4	64.4	64.5	64.6	64.6
		임시일용직	14.3	12.5	12.8	12.8	13.0	13.2
	연령	39세 이하	-	14.9	15.4	15.5	15.3	15.2
		50세 이상	-	56.2	56.1	56.5	57.1	57.6
제조업	소계		3,422,439	4,102,259	4,097,338	4,103,986	4,105,871	4,123,817
	성	남성	73.5	74.1	74.0	74.0	74.2	74.5
		여성	26.5	25.9	26.0	26.0	25.8	25.5
	종사상 지위	자영/무급자	10.0	9.8	10.1	9.8	9.5	9.5
		상용직	81.3	83.3	83.5	83.2	83.5	83.5
		임시일용직	8.4	6.1	5.8	6.5	6.4	6.4
	연령	39세 이하	-	9.2	9.5	9.6	9.0	8.8
		50세 이상	-	62.7	62.6	62.8	65.2	67.3
음식료품	소계		277,331	331,564	343,247	346,021	362,090	374,807
	성	남성	51.6	52.2	52.2	52.3	52.7	53.5
		여성	48.4	47.8	47.8	47.7	47.3	46.5
	종사상 지위	자영/무급자	27.3	23.0	23.0	22.1	21.0	20.2
		상용직	58.7	65.4	66.6	66.9	68.1	69.0
		임시일용직	13.4	10.6	9.6	10.4	10.3	9.9
	연령	39세 이하	-	9.0	9.5	9.8	9.8	10.3
		50세 이상	-	70.6	70.1	69.7	70.0	67.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다. 제조업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9.5%에 불과하지만 식품산업은 2019년 20.2%로 2배 이상 높다. 이는 2015년(23.0%)에 비해 2.8%p가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종사자의 임금근로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식품업체가 영세하여 주로 가족노동력을 활용해 사업장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상용직 비중이 낮았는데 2019년 식품산업 취업자 중 상용직은 69.0%로 제조업 평

균(83.5%)보다 15%p 이상 낮은 수준이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3.5%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종사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식품산업 종사자의 67.0%가 50세 이상 중고령자이다. 전 산업(57.6%)과 비교하면 10%p가량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중고령자 비중이 2015년 62.7%에서 2019년 67.3%로 상승해 제조현장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데, 식품산업은 과거 중고령자 비중이 70% 내외에 달했으나 최근 유망식품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장

〈표 3〉 식품산업 종사자의 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 원, 시간 천 명)

	2011			2015			2019		
	제조업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	음료
월임금총액	2,928	2,080	2,982	3,569	2,490	3,807	3,968	2,940	3,662
월급여액	2,352	1,807	2,406	2,912	2,228	3,181	3,342	2,736	3,162
연간특별급여액	6,903	3,272	6,918	7,878	3,145	7,506	7,509	2,450	5,999
총근로시간	203.7	200.6	209.0	194.1	192.1	201.8	174.6	172.6	178.0
근로자 수	2605.9	116.2	31.6	3070.5	179.5	31.6	3110.6	197.8	49.9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증설 및 창업의 영향으로 그 비중이 소폭 하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산업은 여타 산업과 비교할 때 여전히 영세하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산업이다. 이는 식품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통해서도 뚜렷히 확인된다. 소규모사업장 비중이 높은 관계로 임금수준이 낮는데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이 제조업 평균의 67.5%에 그쳤다. 이후 근로조건 개선으로 2019년 74.1%까지 상승했으나 제조업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임금격차가 크다. 반면 근로시간은 오히려 소폭 높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IV. 유망식품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전망

활력대책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산업성장과 고용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정책성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의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2019년에 그치고 있고,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대 유망식품 분야별로 산업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유망식품 분야가 품목 단위이기 때문에 산업별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차에 걸친 식품산업 진흥계획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목표로 하는 활력대책의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도 용이치 않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한 2019년까지의 통계를 활용해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산업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매출액당 종사자 수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유망식품 정책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된 후 시나리오에 의거해 고용효과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KSIC에서 유망식품 분야(예: 건강기능식품)만 식별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망식품

관련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분류체계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품산업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망식품과 관련이 높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분류기준은 박성재 외, 2021 참조).

제3차 기본계획부터 유망식품분야 선제적 육성정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3~2019년의 고용보험DB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이용하여 유망식품과 관련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고용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모형추정은 유망식품 관련 기업과 유망식품 관련 외 기업의 정책 시행 전후 효과(before-after)를 비교하는 이중 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 정책 시행 후 기간(처리 후 기간)에 유망식품 관련 기업(처리집단)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전체 고용에 대한 고용효과 추정치가 0.06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시행 후 고용이 약 6%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소기업에서만 고용효과가 유의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동적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시차, 2시차, 3시차의 고용을 통제한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정책 시행 후 고용이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은 약 3~5% 증가, 소기업 약 10~12% 증가, 소상공인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기업의 추정치만 유의했다. 패널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한 동적 패널모형 추정 시, 구조적으로 동적 효과의 추정치가 편의를 가지며, 이러한 편의가 다른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추가로 GMM(Generalis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해 분석했으나 앞과 비슷한 추정치를 얻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는 6%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서 유망식품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를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망식품 관련 데이터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간단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식품산업을 유망식품 관련 업종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으로 구분한 후 2019년 기준 매출액 규모에 시나리오별로 각기 다른 성장률 추정치를 적용하였다. 유망식품 외 업종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2015~2019년(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유망식품 관련 업종은 시나리오별로 다른 성장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I은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이용, 두 값을 로그차분해 4로 나눈 값(약 7.4%)을 유망식품 관련 업종에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II는 지난 1~4년의 연평균 성장률 중 최저 성장률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III은 2015~2019년(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구성 시 2015~2019년의 성장률을 적용한 것은 최근의 성장/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고 식품제조업 내에서의 세부 산업 간의 구축(crowd-out) 혹은 시너지 효과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계수값은 과대/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용효과전망 방법은 먼저 2017~2019년 4개년의 성장률을 구한 후 여기에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적용해 2023년까지의 시장규모(매출액)를 전망한 후, 다음으로 광업·제조업조사로부터 구한 산업별 10인 이상 사업체의 매출 전망치와 매출액 100억 원당 종사자 수를 이용해, 산업별 10인 이상 사업체의 시나리오별 고용량을 계산했다. 이어서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고용비율을 이용해 산업별 규모 1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량을 산업별 전체 고용량으로 환산하여 전체 식품산업 고용량 전망치를 추정하는 방식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 추정치와 시나리오별 고용량 전망치를 이용, 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를 고용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표 4>는 시나리오별 식품산업의 고용량 전망치와 기대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2019년 예측 고용량을 전국사업체조사의 2019년 고용량과 비교하면 전체 고용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망식품의 고용량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의 경우, 매출액 측면에서 전자가 더 큰 값을 가지지만, 후자의 경우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의 비중이 커서 전체 고용량 환산 시 더 큰 값을 가진다.

시나리오 III은 가장 낙관적인 전망으로서 2020년 “유망식품 관련”이 약 7만 2천 명, “유망식품 관련 외”가 약 32만 명 수준에서 2023년 “유망식품 관련”이 약 10만 4천 명, “유망식품 관련 외”가 약 34만 명 수준으로 고용량이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망식품에 대한 고용효과는 2020년 약 4천 명 수준이며, 이후 증가하여 2023년 약 4,900~5,9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의 질 변화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정책이 추진된다고 할 때 고용의 질(정규직 비중, 여성고용 비중, 청년층 고용비중, 임금수준, 주당 근로시간, 이직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케 하였는데 이직률 감소 가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대로 나타나 유망식품 육성에 의거해 식품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단기간에 고용의 질이 개선되거나 청년층이나 여성의 고용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의 질 개선은 보다 장기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식품산업 종사자의 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 원, 시간 천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나리오별 고용량 전망					
시나리오 I	375.5	386.0	397.2	409.1	421.7
유망산업 관련	64.5	69.3	74.4	80.0	85.9
유망산업 관련 외	310.9	316.7	322.8	329.1	335.8
시나리오 II	375.5	386.3	398.6	412.5	428.2
유망산업 관련	64.5	69.5	75.8	83.3	92.4
유망산업 관련 외	310.9	316.7	322.8	329.1	335.8
시나리오 III	375.5	389.1	404.3	421.1	440.0
유망산업 관련	64.5	72.4	81.5	92.0	104.2
유망산업 관련 외	310.9	316.7	322.8	329.1	335.8
시나리오별 기대 고용효과					
시나리오 I	3.7	3.9	4.2	4.5	4.9
시나리오 II	3.7	3.9	4.3	4.7	5.2
시나리오 III	3.7	4.1	4.6	5.2	5.9

V.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화정책이 식품산업 성장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선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은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망식품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달성했고 향후에도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를 통한 유망식품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 창업기업을 위한 펀드조성, 기업의 연구역량개발지원, R&D 지원 중심이었다. 하지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실태조사에서 농림부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21개사(5.3%)에 불과했고 현장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유망식품정책 발표는 들어보았지만 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제도를 정비하거나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식품 대기업에 비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이 낮고 높은 유통비용, 낮은 제품신뢰도 등으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소기업 간 격차확대를 방지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 특히 유망식품분야는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이자 벤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인력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창업기업지원, 기술, 인력, 수출 등 다수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 살포식 지원보다는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인력지원정책을 추진하지만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력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거나 일자리아업(인턴, 고용지원금 등)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인력공급보다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한 결과 정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직접일자리 제공하기보다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갖추었고 근로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력지원방식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유망식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유망식품 분야는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정성 차원에서 제정된 규제가 시류를 뒤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원료, 가공 기술, 국제사회에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크다. 예를 들어 특수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의 경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기술 발달로 신물질을 이용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식품은 새로운 원료와 기술을 통해 개발되는 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틀로 포괄되지 않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시장 관련 국제적 추이와 시장 조류를 반영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규제완화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정기적으로 시대조류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분야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망식품분야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IT,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와 접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과 학부제 도입에 따른 비인기학과 기피종조로 식품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인력 공급이 줄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새

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직에 집중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개발인력 외에도 시장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발(개척)할 수 있는 시장 분석 및 개발전문가, 투자 유치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망식

품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필요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해 유망식품분야별 필요인력 규모, 요구되는 전문분야, 공교육 외에 협회·단체를 통한 인력양성 필요성,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해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 김상효·이계임 외(2020),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1/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용선·허성윤(2017),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2020.8), 『포스트바이오닉스 산업 기술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
- _____(2018),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령친화식품』.
- _____(2021), 『2020 펫푸드 시장현황』.
- 박미성·김용열·최재현(2020),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이용선·김경필·박시현·한정훈(201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미성·이용선·최재현(2021), 『식품분야 미래유망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외(2021),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
- 박재홍·강혜정(2013), 『주요 식품산업 정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외(2021), 『2020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박미성·최재현·주준형(2019), 『2020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발표자료.

